

“국회는 민생차원 군 소음법 빨리 통과시켜야”

24개 피해지역 지자체장 연석회의 열고 공동 결의문 발표 이용섭 시장 “특별법 조속한 제정 위해 힘과 지혜 모아야”

군 공항 및 군 사격장 소음 피해 지역인 전국 2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전국 24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지자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은 법률 부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광주시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총 25건(15만3808명, 1705억원)으로, 이 가운데 8건(3만9620명, 945억원)은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17건(7만4843명, 225억원)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이 남아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연석회의는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들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연대와 협력 채널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주시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군 비행장들의 소음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문제란 점을 인식하고 국회는 당리당락을 떠나 하루 빨리 이 법률안을 처리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연석회의 이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돼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



이용섭 광주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등 전국 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방정부 연석회의'에 참석,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남도, 24일 일자리박람회 여수 세계한상대회장

전남도는 24일 여수엑스포 국제관 D2동에서 제18차 세계한상대회와 연계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한상과 국내 34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50개 부스가 운영된다. 구직자 1500여명이 1대1 면접과 관리를 할 예정이다.

운영부스의 경우 전남도·고용노동부·여수시 등이 참여하는 정책홍보·상담관 14개, 가상현실(VR) 면접체험·취업 성공 캠프·리더십 등 취업컨설팅관 8개, 한상기업·국내기업 등이 1대1 채용상담을 하는 현장채용관 28개가 운영된다.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은 재외동포재단에서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인턴 기간은 6개월이다. 인턴에 합격한 청년에게는 생활지원금 최대 600만 원, 해외장기체류보험, 국내내선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상무지구 빈땅 시민공간으로 활용해야”

감사 대상 기관들 기한 넘겨 자료 제출... 시의원 자유발언서 주장

광주 상무지구 내대지를 시민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광주시의 감사 대상기관들이 기한을 넘겨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에 광주시의원(민주·서구2)은 22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무지구 도심 한가운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광주도시공사 소유의 유휴지를 시민들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쇄된 상무소각장 건너편에 위치한 이 땅은 약 4700평의 부지로 상무지구가 개발된 후 2012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했지만 건립 반대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방치돼 있다.

광주도시공사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어려워지자 현재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

정 의원은 “광주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적으로 인해 도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 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한다”며 “상무소각장에 복합 문화공간화를 통한 광주의 대표 도서관과 세계적 건축물이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아파트 건설이 아닌 복합문화 공간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활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환 광주시의원(민주·비례)은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와 교육청의 감사 대상 기관들이 기한을 넘겨서 자료를 제출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 행정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동법 제41조제5항에는 자료제출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 전체 감사대상 85개 기관의 약 53%인 45개 대상기관에서 기한인 11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개 기관만 기한 내 제출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15개월 동안 광주시에 요구한 자료 2176건 중 날짜를 지켜서 제출한 비율은 83%인 1810건 뿐이었고, 교육청에 요구한 250건 중 제출 날짜를 지킨 비율은 68%인 172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밖에 장연주 의원(정의·비례)은 광주글로벌모터스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광주시가 광주시민을 1대주주로 여기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 전체 감사대상 85개 기관의 약 53%인 45개 대상기관에서 기한인 11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개 기관만 기한 내 제출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15개월 동안 광주시에 요구한 자료 2176건 중 날짜를 지켜서 제출한 비율은 83%인 1810건 뿐이었고, 교육청에 요구한 250건 중 제출 날짜를 지킨 비율은 68%인 172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밖에 장연주 의원(정의·비례)은 광주글로벌모터스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광주시가 광주시민을 1대주주로 여기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설사 배불리는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위가 공개하라”

광주 시민단체 촉구...검찰, 1차 수사 결과 조만간 발표

광주 시민단체가 고분양가 논란, 건설사 특혜 의혹에 휩싸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촉구 하고 나섰다. 최근 광주시의회 시장 질의에서는 평당 2000만원에 육박하는 일부 민간공원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바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짓는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정당화하려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로또’ 아파트 발언에 우려를 표한다’며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시장 질의에서 중앙공원 평당 분양가가 1500만~2000만원으로 다른 도시보다 고분양가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용섭 시장은 “높은 분양가 때문에 사업이 안되면 문제지만, 분양받는 사람이 많은데 과도하게 낮추면 로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은 “원가를 알 수 없는 분양사로 이득을 취한다면 이는 건설사를 위한 로또 아파트”라며 “아파트 분양가는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는 언론과 광주경찰청의 타당한 문제 제기 등에 대해 기간답회와 SNS를 통해 정당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업으로, 결국 광주 시민이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이달 안으로 1차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최근 국정 감사에서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롯데슈퍼와 돼지고기 소비 촉진 마케팅

23~29일 456개 매장에서 열려

전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가격이 폭락해 어려운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 롯데슈퍼와 다시 한 번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는 22일 “롯데슈퍼와 함께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 23~29일 돼지고기 소비 촉진 행사인 ‘세이프(SAFE) 한돈! 세이브(SAVE) 한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이프(SAFE) 한돈!’은 돼지고기가 안전하다는 뜻이다. ‘세이브(SAVE) 한돈!’은 어려운 축산농가를 지원해준다는 의미다.

이번 행사는 전국 456개 롯데슈퍼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이뤄진다.

삼겹살과 목살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kg당 1만5900원에 판매한다. 전남도와 롯데슈퍼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마진으로 진행하며 판매량은 10t이다.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달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확진 이후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잠시 상승하다가 돼지열병이 지속되면서 수요부진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와 롯데슈퍼는 지난 6월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업무협약으로 1년간 약 1000억원 상당의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 올 여름 양파 가격 파동 때도 500t을 판매해 전남 농수축산물의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등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협과 원예농산물 1000억 구매약정 체결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와 전남농협, 농협경제지주 대외마케팅부는 22일 2019국 제농업박람회장에서 전남 원예농산물 1000억원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식에는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김성일 대표이사과 전남농협 박하원 경제본부장, 농협경제지주 대외마케팅부 이철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약정으로 전남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원예 농산물을 전남농협이 공급하고, 농협경제지주대외마케팅부가 2019년 10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 1년간 1000억원을 구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전남 원

예농산물 생산 농가가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성일 박람회 대표이사는 “이번 구매 약정을 통해 대외적으로 전남 원예농산물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람회 현장에서 체결된 약정이라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막한 국제농업박람회는 이미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박람회 기간 중 판촉수의 1733억원을 목표로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산재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입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설치하고 착용하면

안전한 작업발판 · 안전난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보호구